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안 경 자 의원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의 이행,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 경 자 의 원

●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도시 대전을 이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 시정의 공약사업 이행과 추진 방향에 있어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한 관리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식재산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약들은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반 여건들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반 여건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건은 첫째, 재정 여건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대전시의 세입은 약 6조 7천억 원입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약 7조 1천억 원에 비해 4천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과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의 세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가운데 보조금의 증가는 정부사업 이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지방채의 증가는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조달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대전시의 누적 지방채무는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대형 공약사업들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채무의 증가가 더욱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둘째, 인구 여건으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진행형이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대전시의 인구는 저위추계를 가정 시 약 13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세대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203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부양비는 2024년 23.8명에서 2040년 52.5명으로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인구의 중위연령은 2024년 현재 44세인데 2040년이 되면 52.4세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이 되면 81만 7천 명으로 2024년 대비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과 소비의 감소 등에 따른 경제 규모의 위축 즉, 지역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수요의 변화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가 대표적이며 대전시의 기능별 세출항목에서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합한 세출의 비율은 2019년 37%에서 2023년 41%로 약 8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대내적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대전시의 기업지원, 과학기술 분야 세출은 전체 세출의 약 5.5%로 전년 약 8.7%에 비해 3.2%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공약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본 의원은 이장우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한 현실적 제약 조건들 속에서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기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 정책을 더 많이 펼치시리라 기대합니다.

2023년 제27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발간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자료에 따르면 87개 공약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약 36조 5천억 원으로 당초 약 55조 6천억 원에 비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선 8기 공약사업의 규모는 대전시의 재정, 인구, 정책 수요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소요예산에서 대전시가 부담할 비용은 당초에는 약 4조 원이었으나 변경 계획에서는 4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시비 편성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SOC 분야 사업입니다.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3·4·5호선에 약 1조 9천억 원,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에 약 4,800억 원 등입니다.

사회기반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는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고 국제 경제 및 정세의 불확실성도 심화됨에 따라 재정 운용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재정이 감당 가능한 투자의 적정수준을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계획된 약 2조 4천억 원의 시비 부담 예산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운영을 맡고 있는 대전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원가 대비 약 29%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습니다.

인구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지하철 노선의 무리한 확대는 교통공사의 재무 부담 증가는 물론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비 투입 비중이 큰 사업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시설 조성사업으로 약 9천억 원의 시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공연장 등 시설은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확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대전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기존 시립미술관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제2시립미술관과 대전예술의전당의 3분의 2 수준의 크기인 대전음악전용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3,70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활용 수요가 있는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체부의 사전 건립 타당성 조사 평가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이 번영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집적하고 상호교류하며 혁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산업거점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총 4건입니다.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될 산업단지 면적은 총 1,764만 4천 제곱미터, 533만 7천평으로 2024년 3월 말 기준 대전시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면적 총 5,230만 7천 제곱미터, 1,582만 2천 평의 약 3분의 1에 이릅니다.

대덕특구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기업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단지 신규개발을 통한 산업시설용지를 확충하게 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역시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4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민자 규모가 10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2024년 6월 기준 이들 4개 사업에 확보된 민자는 총 1,68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후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기존 산업단지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 어떤 산업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분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전략, 이를 이행할 조직과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전력 등 기반시설과 폐수 및 하수, 기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담가능한 지방비 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탄소배출 절감은 전 인류가 이뤄야 할 과업입니다.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RE100 이행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은 신규 조성 산단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촌산단 내 연료전지발전소 투자 및 업무협약이 해지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 절감,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한 필수적 생존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은 우량 기업의 관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2023년 기준 대전시의 전력자립도가 1.8%에 불과했다는 점도 에너지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면적의 대대적 확충과 기업 생산활동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과학기술 역량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을 만든 원동력 이지만 부족한 산업생산기반과 기업생태계의 취약성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의 도약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반도체 분야 대기업의 본사 및 생산공장, 협력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적 여건에서 대전에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알기에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관련하여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 대전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또한 궁금합니다.

다음은,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노년 부양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신종 바이러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한 번 세워지면 도중에 중단되거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3,939억 원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업 예산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소요 예산일 뿐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래 대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약사업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23년과 비교하여 공약사업의 소요 예산이 55조 6천억 원에서 36조 5천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경제과학 분야 공약사업의 예산 변동이 약 20조 원 규모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시철도 3·4·5호선 확충, 천변도로 확장 등 대규모 SOC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조성 공약사업 이행상황과 이들 시설에 대한 활용 수요의 충분성 그리고 활용 전략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체부의 사전 건립 타당성조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공약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 실적, 기업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한 조직과 인력 준비 여부,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부담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소배출 절감 및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유치 여부는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의 대전 설립 추진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복지와 보건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해서는 87개 공약사업의 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3년 제273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및 지하화,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장점은 담대함과 추진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 평판 전국 1위, 한국은행 발표 지역경쟁력지수 전국 3위와 같은 성적은 담대함과 추진력의 결실일 것이기에 남은 후반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성과에도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무리한 공약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너무 큰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도한 인프라 사업은 재정, 인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부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다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에 화답하는 후반기 시정운영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안경자 의원님께서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대규모 사업의 재정수요 등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 점심 못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 답변하려면 한 5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한 거 있으시면 실·국장들한테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사실 재정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미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대전시 지방채가 1조 원 가까이 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특히 지역화폐 발행액을 많이 쓰면서, 사실 다 시민들의 혈세였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아주 상황이 좀 낫습니다.

몇천억 정도 지방채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아직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때 어떤 분은 공약을 별로 안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공약을 세밀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공약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실에 100대 과제 및 공약사업에 대한 진척도를 그래프로 관리하면서 진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서는 5대 분야 87개 사업에 한 55조 6천억 규모로 공약사업을 확정하 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약사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하신 것도 맞고요.

그래서 2년차를 맞아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행정여건 변화 또 사업의 재원 분석도 했고요, 투자계획 등을 반영해서 공약의 사실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36조 5천억 규모로 사업예산의 실질적인 소요를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 재설계하고 명칭 변경한 게 14개쯤 되고요.

사업목표 변경을 4개 정도 했고, 추진시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 여러 가지 11개 정도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또 구체화하는 거에 대해 9개 정도가 있고요.

당초 대비보다는 34% 가까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상 준 거에서 가장 큰 영향은 제2대덕 연구단지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교촌동에 있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사실상 제2의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결합하기로 하면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한 10조 가까이 대폭 조정이 됐고요.

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역시 국가산업단지 충청권의 핵심 단지를 우리 교촌동 나노·반도체 산단에 제2의 대덕연구단지 국가산업단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공이 많이, 재정 수요가 준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유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정이 됐고요.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이걸 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기업 공장들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찬반이 엇갈립니다만 대기업들 공장이 요즘 거의 전 자동화가 돼서 사실은 인력이, 그렇게 고용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이 지역에서 내야 되는데 본사가 대전에 없으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다 세금 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전략 수정을 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성장을

하고 고용하고 세금까지 이 도시에서 내는 이런 구조로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했고요.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민자하고 공공이 결합된 경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경우 또 민자 투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특히 산단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산단은 현재 우리가 535만 평 추가 말씀 있습니다만 우선 제2의 대덕연구단지, 나노·반도체 이 부분과 또 글로벌 융복합클러스터 산단, 원촌바이오 산단, K-켄달스퀘어 산단 또 서구 평촌, 안산국방, 탑립·전민, 하기, 장대동 포함돼 있고요.

또 기업 수요맞춤은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발표하기 전에 지금 마지막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6개 산단이 있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한 530만 평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사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이 공약 실현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과 여러 가지 환경들, 투자계획들을 조정하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공약사업 이행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한 상황에서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 3·4·5호선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도시철도, 대중교통 문제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성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느 곳으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보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대개 광역권으로 발전해 갑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 광역권,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광역권 뭐 이렇게, 광역권은 대전시도

결국은, 우리가 시·도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광역권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대전 광역권, 그러면 결국 대전, 청주, 세종, 인근에 있는 계룡, 논산, 금산, 옥천, 보은 다 결합되는,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도시철도 문제도 대전시 내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세종을 넘어서 청주까지, 또 예를 들면 공주까지, 예를 들면 금산을 넘어서 때로는 전라북도 무주까지 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광역권을 키워서 결국 한 300만이든 이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짜고 착공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전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가장 최악의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이라고, 정책 결정을 늦추면서 정책 결정을 혼선하면서 결국 그 피해를 시민들이, 10년 안이면 끝낼 사업을 28년만에 착공을 하는 상황이 됐다.

사업비는 대전 시비가 3천억이면 될 걸 이걸 정책 결정을 미루면서 지금 시비가 6천억 이상 2호선에 투입하게 됐고, 국가재정도 4천억이면 될 것을 지금 8천억으로, 그래서 저는 대전광역시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를 도시철도 2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도시철도 하나 놓는 데 28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이 도시의 행정력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3·4·5호선, 장기적으로 이 도시의 대중교통을 도시철도로, 고령화 이런 속도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교통수단은 도시철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자매도시 맺고 있는 삿포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호선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도 3·4·5호선 사업을 동시에 행정절차를 밟아가야겠다.

그래야 지금 1호선, 광역철도, 2호선 또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것까지 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시 전체 5개 구를 순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에서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까지 접목만 시키면 그분들은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까지, 접속구간만 먼저, 가장 필요한 구간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해서 3·4·5호선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3·4·5호선 문제는 동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국비, 시비가 결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3·4·5호선은 만약에 2호선을 가정했을 경우 28년, 준공하는 데까지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지금 재정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

단지 이 3·4·5호선을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면 최소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10년 안에 효율적인 재정 투입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제2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는 제2의 시립미술관,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사업을 지난해 11월에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기획디자인을 거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중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성지역에 집중돼 있던 여러 가지 시설을 원도심 중구 쪽에, 중촌동 쪽에 하면서 사실은 문화예술시설을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두 사업 자체가 명품 건축물을 건립하려고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이 남아도 도시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빌바오 시에 있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 유럽 분관은 그 하나로 도시재생에 성공했고 지금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미술관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빌바오를 찾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명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 디자인을 하고 후에

사업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실현하는 데 과연 돈이 얼마 드는지 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7팀이 참여를 했고요, 이미 기획디자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소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023년도부터니까 7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국비사업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으로 완전 이관이 돼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술의전당이든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싶어도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타당성 용역 마무리 단계고요, 이달이면 아마 마무리가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월에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착공하는 목표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목표는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문화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전환으로 과학기술이 접목된 상황인데 융복합 콘텐츠가 대세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미술관을 증·개축하는 리모델링만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문화예술 작품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위해서 대규모 공간 및 최첨단 시설을 도입할 상황이고요, 또 21세기 최첨단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은 무대와 관객석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서 오디토리움 형태로 공연장을 할 계획이고요.

음악전용공연장은 클래식 공연에 적합하게 설계가 됩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만 예술의전당 현재 가동률이 무대 점검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100% 포화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술단체가 많다는 뜻이고요.

클래식 공연이 전체 공연의 80%를 차지하는데 현재 예술의전당 설계 자체가, 음향 시스템이 클래식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을 위한 음악전용공연장이 건립되면 다른 장르의 음악 공연 공급 문제, 공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클래식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1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 충족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간 조성도 검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체부 사전평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어느 단계냐면 건립 계획에서 운영 인력, 미술품 수집 프로그램 등 미술관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평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행하는 법령 개정을 지금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체부장관께서 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저한테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법령 개정하면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사전평가 문제를 했는데, 그래도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저희가 내년 1월쯤에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및 기업 유치 실적도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역에 지금 본사를 상장한 기업이 12개가 됐고요.

올 연말까지 3개가 추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추가 상장하면 63개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미 대구를 뛰어넘었고 지금 숫자로는 부산을 추격 중입니다, 부산이 82개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저희는 부산을 추격하고 인천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시가총액, 미래가치까지 포함하면 시가총액은 이미 대구보다 25조 이상이 크고 부산보다도 한 22~23조, 수치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8월까지 73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투자액은 2조 2,039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한 4천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괄목할 성과 중에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머크사의 투자 유치, 아주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도시들이 대전으로 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바이오 메카가 있는데, 지금 최근 5년 동안 대전 바이오 기업이 기술 수출을 9조 2천억 가까이 했습니다.

40명 되는 기업이 1조 이상 기술 수출을 했고 100명 정도 있는 기업들이 1조 이상을 수출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은 지금 300개 정도가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0개들이 약진하면 10년 안에 대전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석권하고 보스톤과 견줄 만큼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보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돼서 고용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내서 세금도 좀 많이 내면 지역의 투자 여건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LIG넥스원, SK온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했고 K-디펜스라는 방산기업이 한화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최근에 대전 죽동으로 이전하기로, 현재 아마 3천 몇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표께서 저한테 5년 안에 1조 클럽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전에 계속 이전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산단 500만 평 이상을 구축하는 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요.

우선 경제적인, 도시가 규모를 키우려면, 그동안 대전이 가장 미래 예측을 잘못된 것이 200만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저는 150만 명 정도에 최적화된 도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빠졌던 가장 주요이유는 물론 세종시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전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건데 그린벨트 57%에 달하는 대전시의 여건에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500만 평 이상을 하면서 대전의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또 그러면 산업단지만 있으면 되느냐, 기업들이 대전으로 와서 가장 중요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

핵심 연구 인력 그리고 생산 인력 또 영업 인력, 관리 인력 이게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우리가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지역의 사립대 전체 대학을 포함해서 인력 공급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자대학원, 반도체대학원,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반도체설계 관련 대학원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향후 500만 평에 들어올 모든 기업들에 인력 공급하는 데 대전이 최적화하겠다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업은 ABCDQR을 목표로 합니다.

전략 사업,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칩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 그리고 현재 에너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에너지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후쯤에, 제가 시장 때는 꽃을 못 피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실하게, 도시 규모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확실하게 큰 도시,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양질이 많고 핵심 인력이 가장 집적돼 있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10년 후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미 기업유치팀과 투자관리팀 전담조직으로 확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가 성과들을 계속 하리라 보고 있고요.

재정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전하고 신·증설했을 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국비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시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최근에 발표한 바이오특화산단, 기회발전특구는 만약에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 올 경우 세제 혜택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기회발전특구나 바이오특화단지에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줄여서 간단하게 답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방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2030년까지 저희가 20개소에 535만 평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조성계획은 사업비는 10조 8천억쯤 들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예타 승인된 서구 평촌, 장대도침, 한남대 캠퍼스, 안산국방, 탑립·전민, 하기지구는 지금 예타 승인이 돼 있고요.

K-켄달스퀘어, 원촌, 나노·반도체산단, 삼정지구, 오동, 봉곡, 신대지구는 산단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는 날 토지 거래를 묶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본계획을 완료하고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린벨트 해제나 산단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10조 8천억이 그대로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분양하면 다시 회수하고 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추가하는 데는 민간 개발, 산단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나 기업들에게 민간 개발도 좀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사업도 좀 하고 대전시도 직접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산단 조성은 기본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LH 공영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공사채를 재원으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서 준공하면 또 회수해서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그동안의 어려움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게 도시공사가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왔고 전임 시장 때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6천억 이상으로 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해서 3배까지 자본금을 조달해서 직접 도시의 전략 사업을 도시공사가 수행하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역량을 키워서 굳이 LH공사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고 대전의 미래전략은 우리 시 스스로 가꾼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좀 이 부분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가 직접 하는 산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후에 투자 예산을 전액 회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단 500만 평 하면 가장 문제가 역시 전력입니다, 전력.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전력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나 인프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산단 조성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고 발전공기업과 협의해서 건물, 주차장,

지붕 태양광 사업도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정수장이나 취수장, 소수력발전 가능 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 에너지공기업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2.4GW 규모의 교촌산단 등에 건설할 친환경 수소 혼소 발전소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100% 전력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동서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발전공기업, 대전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해서 535만 평과 대전시민이 쓰는 모든 전력을 100% 자급할 수 있는 안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대전 설립 추진을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벨기에에 있는 한국형 아이맥의 모델을 적용했고요, 반도체 연구기관입니다.

사실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타 시설과의 중복성이나 재원 조달 가능성, 설립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이걸 설립할 경우 국비가 최소 2조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전 설립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도 건의를 했고 산자부에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요.

투 트랙으로 과기부에서 현재 나노·반도체 연구기관 구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나노중기원을 확대 개편해서 대전 지역의 산단이나 특화된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과기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라는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산업부든 과기부든 정책에 맞춰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연구의 핵심기관, 실증 연구기관으로 대전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전이 반도체가,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에 반도체 기업들을 확정해 놓고

애먹는 게 전력하고 용수 공급입니다, 공업용수.

그런데 우리는 대청호라는 최적화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전력을 100% 완료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에 이미 반도체 설계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국방반도체, 전력반도체를 이 도시에서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과 지금 센터 설립도, 곧 우리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못 하는 전력, 국방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대전에서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소수의 반도체 생산을 하려면 그 팹이 필요한데 지금 양자팹을 포함한 에트리 이런 데 사실상 이미 팹이 구축돼 있는 데도 있고 팹을 구축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 소수 반도체는 대전에서 생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칩 하나에 1억 원 이상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수요가 44.4%까지 급증하는데 이걸 국가 정책의 재정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시나 각 기초단체도 재정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나 저출생 대책, 청년, 1인 가구의 복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멈출 수는 없고요.

저희가 더 시급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효과가 있는 복지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특히 만남에서부터 출산, 육아 그리고 교육까지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을 완전히 져야 된다.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이 도시에 사는 데 힘을 줄 수 있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해 내년 예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도 좀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지하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소신은 변함이 없고요.

호남고속도로 서대전IC부터 회덕IC까지 전체를 지하화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3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아직, 그에 대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직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이미 호남고속도로가 6차선, 8차선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 18.6km에 대한, 만약에 정부하고, 저는 원칙이 장기적으로는 이걸 지하로 넣는 게 맞다, 위에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공원화돼야 단절도 막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발전하고 있는 유성지역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지난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예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계속 협력해갈 계획입니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이 문제를, 재정사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이렇게 양쪽이거든요, 호남고속도로 우측 좌측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그 구간 지하화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결국 도시 안에 있는 철도, 고속도로는 다 외곽으로 돌리고 이걸 내부 순환도로나 이런 걸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충청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는요, 사실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보령에서 대전 근교까지 아우토반을 건설해서 대전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붙이는 안으로 아마 많은 기업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PF를 일으키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아직 진전이 좀 덜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전시는 독자적인 계획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제2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고요.

현재 예를 들면 청원에서 경상북도 거기 어디더라, 포항까지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 그 선하고 보은 쪽에서 외곽, 금산·논산 쪽으로 돌리는 안 이런 것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고속도로 전체를 같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2 외곽 순환도로 했고요. 그래서 계룡-유성구 세동-공주 7.5km를 활용해서 연장 77km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했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현재 국토부에 용역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반영이 되도록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 내부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대전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만 연결돼 있는데 이걸 더 외곽으로 돌리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게 충청권 메가시티에도 부합하고 대전광역권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워낙 많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실·국장을 통해서 우리 안경자 의원님께 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자 의원(1차 보충질문)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산단 조성하는 데 민자규모가 10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확보된 민자는 1,682억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도시공사 민간투자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게 행정절차가 끝나야 대전 투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도시공사가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 안경자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은 도시공사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대전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에 어느 정도 도시공사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보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현재 도시공사에서 직접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다 그러면 자금 조달을 3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6천억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지 대전도시공사 돈으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 안경자 의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만 해도 대전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재정운용여건 물론 많이 챙기시겠지만 대전도시공사가 잘 추진할 수 있게 시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어야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더라고요.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도시공사 사장의 의견은 현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자금 조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 6천억 정도까지만 자본금을 늘려주시면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아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산업단지가 행정절차 밟고 하는 과정이 보통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여러 역량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도시공사 사장이 아주 자신 있게 이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 안경자 의원

제 우려일 수 있지만 도시공사 사장님이 도로공사에서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장우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